

| 의제별위원회\_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소개 |

# 노사정의 공감대 바탕으로 기술발전 대응방안 집중 논의

강금봉 전문위원

## 발족개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에 의한 기술변화는 향후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범용기술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디지털 전환은 일자리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직업별 업무 성격, 노동조건과 작업조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겠지만, 일자리 감소와 숙련 변화로 인한 고용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우선적인 의제 중의 하나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설치가 제안되었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준비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7월 20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고용 등 경제사회에 미치

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 및 위험 요인을 진단하면서, 디지털 확산이 일자리의 질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포용적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의 역할 제고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 위원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노·사 위원 각 2인, 정부위원 3인, 공익위원 6인, 간사위원 1인으로 총 15명이다.

구분	위원 명단
위원장(1)	전병유(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노동계(2)	송명진(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민주노총(미정)
경영계(2)	이준희(한국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인식(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정부(3)	권용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박성희(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공익(6)	백승렬(어고노믹스 대표),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이문호(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장),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 최병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산업전략연구단장)
간사위원(1)	강금봉 전문위원

## 주요 의제 및 향후 계획

위원회는 자동화의 위험과 새로운 일자리의 태동,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노동의 주요 도전 양상을 살펴보면서 노사협력적 일터혁신 방안, 교육훈련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법 보완 등 정책 및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디지털 전환의 양상과 변화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노사정의 디지털 전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위원회에서는 올해까지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주요 범용기술 동인, 산업 및 기술의 적용 현황과 실태,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의 정책현황, 노사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019년 1월부터는 모빌리티-공유경제, 호출형 주문 등 플랫폼 기반 일자리 유형과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실태, 플랫폼 형태 일자리의 외국 정책 사례 검토, 플랫폼의 노동법적 쟁점과 과제,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과제, 플랫폼의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사관계적 접근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 중반기에는 자동화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참여형 일터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작업시스템과 노동의 변화,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노사협력 및 노동의 참여, 직무 교육 및 재직자 훈련 교육, 노사협력적 일터혁신, 기술변화와 둘러싼 노사협력 모델 등을 중점으로 논의한다.

기술발전은 사람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술발전은 이를 위해 힘써온 노동자들을 배제하거나 노동을 소외시키는 형태로 이뤄져서도 안 될 것이다. 또





한, 디지털 전환이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선도형 혁신 전략'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 축소와 균형 성장,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노사정의 각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